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

김송숙¹, 김유민², 나가연³, 백승희⁴, 이근철^{5*}

¹신한대학교 치위생학부 강사, ²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공학 박사과정, ³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강사,
⁴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교수, ⁵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The effect of policy on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Kim-Song Sook¹, Yoo-Min Kim², Ga-Yeon Na³, Seung-Hee Baek⁴, Kun-Chul Lee^{5*}

¹Lecturer, Division of Dental Hygiene, Shinhan University

²Student, Division of Media technology, Ewha Women University

³Lecturer, Division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⁴Professor, Division of Leadership, Yemyung Graduate University

⁵Lecture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 노동시장, 정책효과,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Abstract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rd and 12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on the labor market of PAS users' particip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64 program groups using the Korean PAS and 344 control groups not using the Korean PAS were selected using Caliper matching amo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 chi-square test was used for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and a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and a double-differ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D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policy before and after the Korean P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tatistically, PA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market. This is due to the low number of system users, resulting in low post-hoc power, incomplete matching and limited availability of PAS Assistants for Disabled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specialized services and syste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disabled and household members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 Convergen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abor market, Effect of policy,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이 논문은 2019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298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B5A07092986)

*Corresponding Author : Kun-Chul Lee(kcisc.kr@gmail.com)

Received January 17,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9,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1.1 서론

노동력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이는 생산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력을 모색하고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와 같은 노동력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 공감하고 제공되어야 하는 섬세한 부분이므로 기계가 대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력을 보유한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잔존하면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애인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존재할 경우 돌봄 의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사회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돌봄은 주로 가족이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가족 기능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사회적 변화로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과 수행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1,2]. 서구 복지국가는 이에 대해 노동시장이 가족의 변화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고 장애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3].

국내에서도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부양가구의 부담을 감소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4]. 이후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며 확대·개편되었다[4].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에서 비추어 보면 진보된 것이며, 제도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중 제도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관심을 둔다.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공식적인 자립지원이 수급자 가구원의 비공식적인 자립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면, 돌봄 제공자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는 공식적인 자립지원이 비공식적 자립지원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

도가 실제 목표로 했던 수급자 가구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는지,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얼마만큼 효과적 인지 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돌봄 부담이 감소되면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이래 장애인 돌봄부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법률에 입각해 도입된 지 1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용 자격의 까다로움, 본인부담금 부담, 서비스 제공시간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으며[5],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여전히 수급자 가구의 노동 과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서구유럽 국가들조차도 제도와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개되고 있을 뿐[7] 수급자 가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장애인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제도로 인한 수급자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8], 공공인력의 직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9],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방법론을 이용해 정책을 평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차이며,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 중 경제적 효과로서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제 6차년도(2011년)와 12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장애인 가구와 가구원의 다양한 특성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2007년부터 3년 마다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귀속연도 기준 2018년)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 64명과 영향

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여 제도 실시 전 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 부양가구원이다. 해당 제도의 가구원은 실험집단이 되고, 비수급자 부양가구원은 통제집단이 된다. 이 제도는 2007년 기준으로는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1~3급으로 제도가 확대·시행되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인 귀속연도 기준 2010년(6차년도)과 제도 확대·시행 후인 귀속연도 2016년(12차년도)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2.2 변수정의

2.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정책 효과로서 제도 도입의 효과는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참여가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제도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참여 효과변수로 경제활동참여율, 연간총근로소득, 노동참여시간인 연간근로시간과 주당평균근로시간으로 하였다.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설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변수인 시기더미, 집단더미, 정책효과더미(상호작용더미)이다. 시기더미는 제도 시행여부로 시행 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제도 시행 전은 6차년도 자료로 '0'의 값을 가지며, 시행 후는 12차년도 자료로 '1'의 값을 가진다. 집단더미는 제도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제도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 '1'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0'으로 구분하여 더미화하였다. 정책효과더미는 제도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대적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순수한' 효과인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시기더미×집단더미인 상호작용항을 통해 구성하였다.

2.2.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정책에 대한 개입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만성질환 유무로 설정하였다.

2.3 자료분석

2.3.1 성향점수매칭(P propensity Score Matching)

본 연구는 제도 수급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최적일치법(STATA의 optmatch의 caliper 0으로 설정)을 이용하여 1:5의 비율로 매칭하였다. 이후 6차년도와 12차년도에 동일하게 관찰되는 대상을 선택한 결과, 수급집단(실험집단) 64명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동질성이 있는 비수급 집단(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2.3.2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

제도의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과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선택편의를 제제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중차이모형은 시간불변의 교란항을 제거할 수 있으며, 효과성도 파악되므로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10]. 단 순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제도 실시 전인 귀속연도 2010년 실험집단과 제도 실시 후의 통제집단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차를 구하고 다시 그 차의 차를 구하여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경제적 요인 및 기타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며, 두 집단에 대한 시간적 흐름이 통제되어 제도의 순수효과를 추정가능하다. 실험집단은 귀속연도 2010년에는 비수급자였다가 2011년에 수급자가 된 집단이며, 통제집단은 귀속연도 2010~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비수급자 집단으로 성향점수 매칭에 의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도록 구성된 집단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같은 기타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며,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추정 결과는 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STATA 16.0을 사용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Variable	Variable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	Labor force participation	Participation(Non-participaion=0)
	Gross annual income	

	Annual working hours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Independent variable	Time dummy	2017year(2011 year=0)
	Group dummy	Program(Control=0)
	Policy effect dummy	Interaction=Time dummy x Group dummy
Control variables	Gender	Female(Male=0)
	Age(year)	30-39, 40-49, 50-59, ≥60 (20-29=0)
	Household members(person)	2-4, ≤5(1person=0)
	Region	Metropolitan(Rural=0)
	Education	Middle, High school, ≥College (≤Elementary=0)
	Marital status	Separated, divorced, widowed, Never married(Married=0)
	Chronic disease	Yes(No=0)

3. 연구결과

3.1 성향점수 매칭 전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2는 성향점수 매칭 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18,036명으로 실험집단 64명(0.35%), 매칭 전 실험외집단 17,972명(99.65%)이었다. 가구원의 교육 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초졸 이하 54.69%, 중졸 1.25%, 고졸 3.13%, 대졸 이상 10.94%이었고, 실험외 집단은 초졸 이하 54.69%, 중졸 31.25%, 고졸 10.68%, 대졸 이상 20.28%로 초졸 이하가 가장 높았다.

연령의 경우 실험집단은 50대 31.25%, 60대 이상 26.69%이었고, 실험외집단은 50대 16.01%, 60대 이상 41.78%로 나타났다. 성별은 실험집단은 남성 65.63%, 여성 34.38%이었고, 실험외집단은 남성 43.13%, 여성 56.87%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efore matching

Variable		Program(%)	State before matching(%)	chi ²	p-value
Education	≤Elementary	35(54.69)	7,252(54.69)	9.552	0.023
	Middle school	20(31.25)	5,157(31.25)		
	High school	2(3.13)	1,919(10.68)		
	≥College	7(10.94)	3,644(20.28)		
Age	20-29	9(14.06)	2,142(11.92)	12.289	0.015
	30-39	7(10.94)	2,324(12.93)		
	40-49	9(14.06)	3,119(17.35)		

	50-59	20(31.25)	2,878(16.01)		
	≥60	19(26.69)	7,509(41.78)		
Gender	Male	42(65.63)	7,752(43.13)	13.146	0.000
	Female	22(34.38)	10,220(56.87)		
total	18,036	64(0.35)	17,972(99.65)		

p<0.05

3.2 성향점수 매칭 후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3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408명으로 실험집단 64명(15.68%), 통제집단 344명(84.31%)이었다. 가구원의 성별은 실험집단은 남성 65.60%, 여성 34.40%이었고, 통제집단은 남성 78.50%, 여성 21.50%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연령의 경우 실험집단은 50대 31.20%, 60대 이상 29.70%이었고, 통제집단은 50대 44.80%, 60대 이상 28.50%로 50대, 60대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1인 37.50%, 2인~4인 56.25%, 5인 이상 6.25%이었고, 통제집단은 1인 10.20%, 2인~4인 79.90%, 5인 이상 9.90%로 가구원수가 2~4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의 거주지역은 실험집단의 경우 비수도권 68.75%, 수도권 31.25%이었고, 통제집단은 비수도권 61.05%, 수도권 38.95%로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의 교육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초졸 이하 54.70%, 중졸 31.30%, 고졸 3.10%, 대졸 이상 10.90%이었고, 통제집단은 초졸 이하 57.85%, 중졸 29.65%, 고졸 2.00%, 대졸 이상 10.50%로 초졸 이하가 가장 높았다. 가구원의 결혼상태는 실험집단에서 결혼 21.88%, 이혼·별거·사별 26.56%, 미혼 51.56%이었고, 통제집단은 결혼 70.30%, 이혼·별거·사별 16%, 미혼 13.70%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만성질환 여부는 실험집단의 경우 만성질환 없음 81.25%, 있음 18.75%이었고, 통제집단은 만성질환 없음 50.87%, 있음 49.13%로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fter matching

Characteristics		Total(%)	Program (%)	Control (%)	x ² (p [*])			
		408	100.0	64	15.68	344	84.31	
Gender	Male	312	76.40	42	65.60	270	78.50	4.962 (0.036)
	Female	96	23.60	22	34.40	74	21.50	
Age	20-29	33	8.10	9	14.10	24	7.00	1.598 (0.139)
	30-39	33	8.10	7	10.90	26	7.50	
	40-49	51	12.50	9	14.10	42	12.20	
	50-59	174	42.60	20	31.20	154	44.80	
	≥60	117	28.70	19	29.70	98	28.50	
Household members (person)	1	59	14.50	24	37.50	35	10.20	32.601 ((0.001))
	2-4	311	76.20	36	56.25	275	79.90	
	≥5	38	9.30	4	6.25	34	9.90	

Region	Rural	254	62.25	44	68.75	210	61.05	1.368 (0.264)
	Metropolitan	154	37.75	20	31.25	134	38.95	
Education	≤Elementary	234	57.40	35	54.70	199	57.85	0.442 (0.856)
	Middle school	122	29.90	20	31.30	102	29.65	
	High school ≥College	9	2.20	2	3.10	7	2.00	
Marital status	Married	256	62.75	14	21.88	242	70.30	63.155 (0.001)
	Separated, divorced, widowed	72	17.65	17	26.56	55	16.00	
Chronic disease	Never married	80	19.60	33	51.56	47	13.70	20.174 (0.001)
	No	227	55.60	52	81.25	175	50.87	
	Yes	181	44.40	12	18.75	169	49.13	

*p-value<0.05

3.3 노동시장 참여 효과성 비교

Table 4는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증감율을 파악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참여효과 변수인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1.22였고, 도입 후는 -1.21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01이었으며, 증감율은 -0.08%이었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10.594, 도입 후 10.589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05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20.0%이었다. 연간총근로소득(천원)의 경우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17.97이었고, 도입 후는 -17.96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1이었으며, 증감율은 -0.06%이었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26.50, 도입 후 26.49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1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76.92%이었다. 연간총근로시간은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469.35이었고, 도입 후는 469.13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22이었고, 증감율은 -0.05%이었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327.97, 도입 후 327.81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16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35.80%이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301.91이었고, 도입 후는 301.77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15이었으며,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143.37천시간, 도입 후 143.30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7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05.63%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and increase/decrease rate

	Program(A)				Control(B)				(A)-(B)	I/D rate(%)
	Before	After	D	I/D rate(%)	Before	After	D	I/D rate(%)		
	Mean	Mean			Mean	Mean				
Labor force participation	-1.22	-1.21	0.001	-0.08	10.594	10.589	-0.005	-0.05	0.01	-120.0
Gross annual income (One thousand won)	-17.97	-17.96	0.01	-0.06	26.50	26.49	-0.01	-0.05	0.02	-176.92
Annual working hours	469.35	469.13	-0.22	-0.05	327.97	327.81	-0.16	-0.05	-0.06	35.80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Thousand hours)	301.91	301.77	-0.15	-0.05	143.37	143.30	-0.07	-0.05	-0.08	105.63

D : Difference
Increase/decrease : I/D

3.4 다중이중차이 회귀분석

Table 5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제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제도 도입 후 경제활동참여(Coef=-0.31), 연간총근로소득(Coef=-0.13), 주당평균근로시간(Coef=-0.17)은 감소하였고, 연간총근로시간(Coef=0.28)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Difference-in-differences multiple analysis

	Labor force participation		Gross annual income		Annual working hours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Policy effect dummy	-0.31	0.22	-0.13	0.25	0.28	0.21	-0.17	0.04	
Group dummy	-6.09	3.63***	-0.67	1.21	-4.77	3.56***	-16.57	3.57***	
Time dummy	0.09	0.19	0.09	0.39	-0.57	1.02	-0.24	0.13	
Gender	-4.397	4.13***	-1.75	4.60***	-3.40	4.34***	-14.25	4.44***	
Age(year)	-0.05	1.54	0.003	0.19	-0.09	2.42**	-0.32	2.39**	
Household members	0.04	0.12	0.14	0.89	0.27	0.74	0.63	0.49	
Region (Metropolitan)	0.72	1.00	0.63	1.95*	1.26	1.61	6.14	2.24**	
Education	Middle school	0.45	0.50	0.87	2.18**	0.48	0.49	3.27	0.97
	High school	-	-	-0.57	0.63	-7.9	3.53***	-29.10	3.78***
	College	-1.02	0.94	1.34	2.48**	-0.88	0.67	-2.09	0.46
Marital status	Separated, divorced, widowed	-2.99	2.71***	-1.13	2.39**	-2.06	1.79*	-10.25	2.56**
	Never married	-2.17	2.05**	-1.28	2.41**	-2.93	2.26**	-11.20	2.49**
Chronic disease	1.51	2.40**	0.41	1.42	-0.17	0.24	1.21	0.50	
Cons	6.28	2.27**	1.49	1.22	12.94	4.36***	46.01	4.47***	

S.E: Standard Error
* p<0.1; ** p<0.05; *** p<0.01

4. 고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 삶의 질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도입되었다[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가족 부담의 경감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책효과 중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서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차와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부양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관점으로 살펴 보았을 때 권 등[13] 연구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가 노동시장 참여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3].

한편, 제도와 노동시장 참여에의 유의하지 않은 차이에 대한 결과 해석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2017년(귀속연도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수는 56명으로 통계적 검정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통제집단에 대한 회귀계수의 크기는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주당평균근로시간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post-hoc 검정력은 44.3%의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낮은 검정력으로 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이후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는 미비하다'는 결론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해석 이전에 제2종 오류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1:5의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으나 통제집단이 더 추출되는 불완전한 매칭이 이루어진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주요 요인들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포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패널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변수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확률효과모형을 4가지 유형으로 수행했을 때도 결과 값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다차원적인 데이터 검토 및 분석과정을 고려할 경우 제도와 노동시장 참여와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관한 결과

는 일부 자료의 한계로 발생한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적 관점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진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책 모형에 적용했을 때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등 제도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또한 청소년, 성인 장애와 같이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않다[15].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와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하며, 정신 장애인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 간질장애인은 증상 별 대처방법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수요에 관한 활동 지원사가 현재까지는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16]. 사회복지 분야가 잘 발달된 일본은 이 제도 외에 서비스 종류별 필요에 따라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및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5]. 이러한 세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는 가족 돌봄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까지는 가구원을 장애가족의 돌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의 장애인부가조사는 2007년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제도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확대는 2019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자료는 2019년도에 14차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조사는 2018년이므로 2019년 이후 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제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자료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동시장 참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지만,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제도 이용여부에 대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실험군과 통제군 선정과 분석에 있어 이중차이분석을 통한 제도의 효과 평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보정 등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제도의 연령제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자부담 등의 문

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제도는 장애인 대상자와 부양가구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S. S. Lim & J. S. Lee. A Study on Women`s Care-work in the Personal Assistant Service by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2), 533-559. DOI : 10.22143/HSS21.7.2.25.

[2] E. A. Lee. (2017). *An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Family Caregivers*. M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3] G. Esping-Andersen, D. Gallie & A. Hemerijck, J Myl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 Oxford University.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2017 Personal Assistance Service business guide*.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H. Kim et al. (2013). *Policy Study for Establishing Comprehensive Measures for Protection of the Severely Disabled: Measures to Improve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ystem..* Sejo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6] Y. C. Byeon et al. (2015). *A study on the provision of regular activity support through a survey on the activity support for the severely disabled*. Sejo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7] T. I. Solovieva, R. T. Wallsh, D. J. Hendricks & D. L. Dowler. (2010).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aking productive employment possible. *Journal of Rehabilitation*. 76(4), 3-8.

[8] H. N. Kim. (2009). *A Study of Influentia IFactors on PAS Users' Satisfacton at Urban-Rural Communities*. Master. Daegu University, Gyeonsa.

[9] J. Y. Ha. (2014). *A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agency providing personal assistant service of the disabled on nowon in seoul*. Master. Hansung University, Seoul.

[10] R. F. Schoeni & R. M. Blank. (2000). What has welfare reform accomplished? Impacts on welfare participation, employment, income,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45. DOI : 10.3386/w7627

[11] [internet],[cited 2021 Jan 4], Available From: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12] H. J. Kwon & J. Y. Ko. (2015).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Labor Supp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4), 279-299.

[13] S. S. Shim. (2017). A Critical Review o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by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2010) and the principl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56, 237-268.

[14] J. H. Jeon.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 Focusing on Personal Assistance Sevice and Personal Care Assistance Program of US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2, 255-278.

[15] Y. C. Byeon et al. (2015). *A study on the provision of regular activity support through a survey on the activity support for the severely disabled*. Sejo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김 송 속(Song-Sook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14년 8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보건, 사회복지
- E-Mail : proks@naver.com

김 유 민(Yoo-Min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철학사)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 석사)
- 2020년 2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공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기술사회 정책, 미디어공학
- E-Mail : juliakym10@naver.com

나 가 연(Ga-Yeon Na)

[정회원]



- 2016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이학석사)
- 2020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과정)
- 2019년 2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강사
- 관심분야 : 농인, 척수장애

· E-Mail : openvessel@gmail.com

백 승 희(Seung-Hee Back)

[정회원]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201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공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교수
- 관심분야 : 기술사회 정책, 경영전략,

리더십

·E-Mail : q100sh@gmail.com

이 근 철(Kun-Chul,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공학사)
- 2003년 2월 : 숭실대학교 무역학과(경영학석사)
- 2010년 8월 : 숭실대학교 무역학과(경영학박사)
- 관심분야 : 통계

· E-Mail : kcisc.kr@gmail.com